

# POLITICS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 남구 시설공단 설립 속도내나 노소영 의원 발의...상임위 통과

광주 남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는 10일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소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의회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위탁·대행 사업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회 동의 요건도 신설됐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 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서 'AI 팹리스 컨퍼런스' '클러스터 조성...' 내일 논의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서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과 AI 전문가들이 참석할 가운데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광주소프트클러스터뷰브(GCC) 3층 MX스튜디오에서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AI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경주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의 'AI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의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강현서 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팹리스의 집적과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온디바이스 AI의 중요성과 팹리스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를 위한 광주시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 패널토론에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테크놀로지 박준규 대표이사, 팹리스 기업인 ㈜모빌티 신동주 대표이사, ㈜대우테크 김경우 부사장, IP벤처 기업인 ㈜에이퓨처 김창수 대표이사, 배리실리콘 오우성 한국지사장이 참석해 '광주 팹리스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는 기술 기반 산업도시로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AI 팹리스 클러스터 허브 인 광주, 열리아스 콜로키움'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광주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인공지능융합사업단, ETRI 호남권연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주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가 AI팹리스 클러스터 허브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 낼 핵심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영광출신 손솔 의원 “정권교체는 준엄한 심판”

###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22대 국회 최연소 “진보당으로 돌아갈 예정”...진보당 제4당 승격

“이번 정권교체는 계급과 내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이 내란종식의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손솔 의원(사진)은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민주당(전 더불어민주당연합) 15번 순서 후보자를 국회의원 승계자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하면서 발생한 결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다.

각 당은 추천 몫을 나눠 공천했고, 이 중 14명이 당선됐다. 당시 후보 순위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이었다.

총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해 손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손 의원이 승계 받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준 정당으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이 제명해 줘야 한다.

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선

당시 협의에 따라 진보당으로 돌아갈 예정이다”며 “민주당과 이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광 출신으로 1995년생인 손 의원은 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다.

손 의원은 이화여대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진보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해왔다.

손 의원이 진보당으로 돌아가면, 진보당은 개혁신당(3석) 보다 의석수에서 한 석 앞서며 원내 제4당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서영교 합동 토론회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왼쪽)과 서영교 의원이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한중정상 첫 통화...“한중 관계발전·APEC 협력”

### 李대통령,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

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외장(한국)과 내년도 외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 대법관 증원법 등 쟁점법 속도조절

### 민생 우선 기조 악영향 우려

### 새 원내지도부에 판단 넘겨

### “민생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공급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상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히려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비롯해 △헌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 △시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을 국정 최우선에 두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히나노 기간'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협치가 어려워지고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상의하여 연기된 것인가”라고 묻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의 의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컸지만 이들 법안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와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우선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광주 국가유산 활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국가유산청 공모서 월봉서원 등 8개 프로그램 선정

광주시가 국가유산주간을 맞아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8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자치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광주향교 路(로) 거닐다 시시각각,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달의 정원-월봉서원, 신장동 타임캡슐을 열러라, 광산사계 夢(몽) 네날의 노래, 돌의 시간, 무양 In the city 등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주간에 집중 운영한다. 이에 국가유산주간을 전국 최대 규모 지역유산축전이라 일컫는다.

'일상에서 만나는 국가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가유산주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400여 국가유산 현장에 답사,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무형유산 가이딩 병창을 비롯한 환백당, 월봉서원, 원효사 등 광주의 국가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시민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토코 콘서트를 열고, 만드리 들노래 체험, 사팔밤상 체험 등을 선보인다.

남구는 전통유학 교육기관인 광주향교에서 오는 11월까지 '광주향교 路(로) 거닐다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원효사에서 오는 10월까지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원효사의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나의 이웃, 다시·다도 체험, 주상절리 목판 체험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월봉서원 등에서 오는 12월 까지 '달의 정원-월봉서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월봉서원에서 선비의 하루를 체험하고, 달빛 아래 LP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참가자들의 사연을 함께 들으며 힐링하는 음악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대표 브랜드 10선에 올랐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광주시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채무부담 완화”

### 채은지 의원 “자금운용 점검·재정 전략 전환 필요”

광주시의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자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9일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 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 광주시의 채무가 2조원을 넘은 만큼 채무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자금운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광주시 채무 2조원 돌파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지방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19개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며, 각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일반회계 용자를 통해 시 주요 현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